

# 대구지역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실태파악 및 가족복지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sup>1)</sup>

A Study on Work and Family Life of Married Female Workers and  
Family-Welfare Policy Implications

— The Lowclass in Daegu Area —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박혜인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  
Professor : Park, Hye In

##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V. 대구지역 저소득층 취업여성과<br>가족복지정책 : 분석 및 대책 수립 |
| II. 연구절차와 방법                    | VI. 맺음말                                   |
| III. 가족복지 · 여성복지 · 가족복지정책       | 참고문헌                                      |
| IV.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생활<br>분석 결과 |   |

##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work and family life of married women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low class in Daegu area. Data were gathered from the use of face-to-face interview method from a sample of 564 married working women. And the political printed materials of family welfare policy(1988~1993)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Most of the respondents remain unstable in their working situation, with the double burden of a paid work and housework.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family policies for married working women, such as

1) 이 연구는 199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 중점과제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아울러 이 연구결과의 일부는 한국가족학연구회 ·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가정복지세미나(1990.10.23)와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1992.5.22)에서 발표하여 수정, 가필한 뒤 각각 출간함. 또한 관련연구 I · II · III(참고문헌 참조)은 별도로 발표함.

establishment of various child care centers, study room for adolescence, counselling center, job-training center, and dissemination of egalitarian sex-role attitudes.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formulation of family net works be promoted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and family welfare programs.

##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하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은 여전히 중시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까닭에 가족복지의 책임은 매우 크다. 최근 유명주(1993:13)는 가정학이 인간·가족과 미시적 환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을 지적하며 가족과 광역환경과의 관계 연구를 제안하였다<sup>2)</sup>. 이것은 가족구성원과 그를 둘러싼 환경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전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결국 가족연구는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가정학의 목표와 연관지어 볼 때 가족복지로 연결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일변도의 발전은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가 도시저소득층의 문제인데 이들은 농촌의 밑어내는 힘에 의해 도시로 이주하였다(국토개발연구원, 1989). 이들 대부분은 나이도 많고 기술, 자본도 없이 불안정한 일에 종사하며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였고 이제는 저소득층이 이농민에서 총원되기보다는 도시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 1989). 또한 집단유동성이 심한 60, 70년대의 도시저소득층과 달리 오늘날의 저소득층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김태근, 1991). 결국 경제성장의 반대급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문제는 분배정의가 강조되는 시대흐름에서,

그리고 권리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고 복지지향으로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근본적 대책 수립의 과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 따라 가정생활과 취업활동을 견해야 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및 가정 내에서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때 가족성원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감등적 관계(Hartmann, 1981)에 있으므로 단일단위로서의 가족의 개념과 함께 여성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일자리도 제한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의 37.2%에서 1992년의 47.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1991년에는 약 40%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기혼여성은 47.0%로 1985년의 41.0%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박숙자, 1993:237). 그중 특히 취업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기혼여성들은 빈곤과 여성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상태이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그에 기반을 둔 복지방안 및 정책의 수립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별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시대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저소득층 가족정책이나 대구지역의 저소득층 대책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소홀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학계 역시 분석대상의 방대성과 연구여건의 불비로 인하여 만족할만한 연구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책의 대부분은 가족보다 개인을 대상으로

2) 한국가족학연구회는 이미 이러한 입장에서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하우, 1992),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3호, 1992), 이혼과 가족문제(하우, 1993), 수험생가족(한국가족학연구회·서울특별시 가정복지세미나, 1993) 연구를 통하여 가족복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모색한 바 있다. 또한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1993)를 통하여 직접 가족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하므로(雀部·桂良, 1991:7) 가족 차원의 분석이 더욱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대구지역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생활을 조사, 분석하여 가족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관련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판단기준 및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 II. 연구절차와 방법

### 1. 연구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단계는 저소득층가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접근관점과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문헌연구(박혜인, 1990:1992)로서 저소득층가족문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2). 둘째 단계는 저소득층가족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작업인데, 취업여성을 비공식·공식부문으로 구분하여 노점·행상(최미경·박혜인, 1991. 이하 연구Ⅰ이라 함)과 파출부(현정혜·박혜인, 1992. 이하 연구Ⅱ라 함) 그리고 생산직<sup>3)</sup>(유가효·박혜인·박충선·조희금, 1991:1992. 이하 연구Ⅲ이라 함)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각각 보고하였다. 그리고 셋째 단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복지대책 수립을 논하였다. 본고는 그중 셋째 단계이자 종합보고서이다. 앞 단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가족복지이론을 검토한 후 실증결과와 관련시켜 복지정책을 검토하였다. 복지현실은 대구시 부녀복지과, 여성회관, 종합복지관에 대한 현장조사자료와 시정자료(대구직할시, 1988:1992:1993), 그리고 경험조사한 질적자료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 2. 도시저소득층의 개념과 연구대상

소득이라는 경제적 지표에 의한 도시저소득층의 규정은, 빈곤이 이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

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빈곤선(poverty line)'을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도 자의적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은 빈곤문화론적 접근(Waxman, 1983), 도시비공식부문론(조희연, 1985)과 같은 이중사회론적 접근과 상대적 과잉인구론(이원덕, 1982)으로 구분된다. 한편 취업현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적자원론, 노동시장분절론, 마르크스이론 및 산업예비군 개념,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등이 있다(김양희, 1991). 이때 생산영역만을 기준으로 고찰할 경우, 서로 이질적이고 분산된 노동시장에 제각기 개별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저소득층을 하나의 계급 또는 상대적 과잉인구로 단일하게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소비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동질성을 간과하게 된다. 결국 도시저소득층은 취업구조, 주거 및 소비양식, 사회적 자원의 배분양식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그 독특한 성격이 규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저소득층의 성격 규명은 이들 삶의 어느 특정한 측면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속성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시각을 견지할 때 비로소 파악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저소득과 불완전취업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며 도시의 빈곤지역에 밀집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시저소득층이라고 개념 짓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지위가 취업여성의 생활의 질을 설명하는데 영향력이 높으므로(이연숙 외, 1992) 직업지위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직과 비공식부문(홍두승, 1983)에 종사하는 기혼의 취업여성 가족을 통해 도시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과 내용은 <표 1>과 같다. 연구Ⅰ은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살고있는 거주지역(남산4동, 고성동, 비산1동, 대봉1동)에서 노점·행상에 종사하는 대상을 선정하였고, 연구Ⅱ는 파출부일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 연구Ⅲ은 생산직(1차조사: 6개제조업체, 공단밀집지역, 2차조사: 서구이현공단, 북구제3공단, 동구의 16개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을 대

3) 생산직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지원(199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에 의해 수행되었음.

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에 따라 조사내용이 일치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취업상황과 가족구성이 상이한 때문이며 본 연구의 제한점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가족복지 추이에 대한 종단적 검토는 시정백서를 주요 분석자료로 삼았는데 연대를 소급하지 못하고 가정복지국이 발족한 1988년을 기점으로 고찰한 것도 제한점의 하나이다. 질적인 연구는 복구·비산동 어린이집의 취업모와 원대시장의 노점·행상 그리고 수성구 남부시장의 노점·행상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1990년 1월 예비조사의 형태로 출판한 질적인 심층면접은 그후 1993년 6월까지 추후조사 내지 자료보완의 형태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면접횟수는 1회에서 5회이상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며 비구조화된 설문이었다.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본고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도 제한점의 하나임을 밝힌다.

### Ⅲ. 가족복지·여성복지·가족복지정책

#### 1. 가족복지에 대한 비교문화론적 고찰

구미에서는 가족복지(family welfare)를 가족복지사업(family social work, family social welfare, family welfare service)과 혼용하여 “가족생활을 보호·강화하고, 가족원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서비스활동”이라고 정의하고(NASW, 1965:309), 다음 세 가지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첫째, 가족스트레스 상황

둘째, 경제적 곤궁과 사회자원도입의 곤란 셋째, 가족원의 기능장애이다. 특히 Feldman과 Scherz(1967)는 가족주기에 따라 복지영역을 설정하고 자녀사회화, 성인의 정서적 안정, 취업모를 위한 제반시책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서구사회가 개인 중시의 바탕에서 가족 기능을 재평가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 가족보호는 어디까지나 ‘家’라는 ‘공동체’가 주체여서 역사적 배경이 상이하다. 즉 가족복지는 ‘가족원의 역할을 실행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姬岡, 1967:28). 한편 一番ヶ瀬(1968:168)는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경제보장, 사회보장, 주택정책이 가족복지의 전제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의 가족복지는 아직 그 개념이 모호하여 개념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최성재, 1992). 변화순(1989, 1991)은 가족복지에 윤락녀, 모자가족, 아동복지를 다루고 노인,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저소득층 취업여성은 제외하였다. 가족복지의 체계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가족복지가 다른 복지분야와 중첩되어 구분이 곤란한 측면도 한 이유가 된다. 또 다른 이유는 가족문제를 규정할 때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미에서 규정한 것을 편의상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성천, 1989:109).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가족제도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입장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족의 중요성과 책임을 크게 강조하면서도 가족을 도울 대책은

〈표 1〉 조사대상 및 내용

| 조 사 대 상 |       |       | 인원  | 조사시기(심층면접)                             | 내 용  |
|---------|-------|-------|-----|--|--|
| 연구 I    | 비공식부문 | 노점·행상 | 132 | 1990.2.26~1990.3.13<br>(1990.1~1993.6) | 주거 및 경제실태, 부양형태<br>생활만족도, 역할분담                           |
| 연구 II   | 비공식부문 | 파출부일  | 202 | 1991.2.7~1991.3.4                      | 주거 및 경제실태, 부모자녀관계<br>부부관계, 가정관리, 가족역할참여<br>파출일실태, 취업의식   |
| 연구 III  | 공식부문  | 생 산 직 | 230 | 1990.7~1991.1                          | 가계경제, 주거상황, 부부관계<br>자녀보육 및 관리, 가사노동<br>취업실태, 근로의식, 직업만족도 |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복지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켰다. 기존의 전통가족을 이상형으로 고집하고 또한 가족을 국가보호기능의 바람직한 대체물로 보며, 안식처의 기능을 가족이 맡아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가족제도는 인정한다. 반면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은 부정하는 까닭에 '복지주의 가족관'과 대립되는 '보수주의 가족관'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 국가는 요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통합시키는 광의의 가족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가족복지의 대상은 가족 전체(family as a whole)에 영향을 주는 가족문제로 보아야 한다(김성천, 1989). 즉 가족관계는 물론 가족을 둘러싼 사회제도와와의 관계를 도와주기 위하여 가족사회사업의 형태로서 심리 측면을 미시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 동시에 가족복지정책으로서 환경과 관련된 측면을 예방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한다<sup>4)</sup>. 본연구에서는 위의 가족사회사업과 가족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의미로서 가족복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여성복지

한편 여성복지에 대한 접근은 보완주의모델과 제도주의모델(Wilensky & Lebeaux, 1965:120)의 입장이 상이하다. 보완주의에서는 복지의 대상이 불우여성에 한정되고 여성문제발생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반면 제도주의는, 전체여성이 대상이고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 또 보완주의는 여성문제 해결에 개인치료의 미시적 접근을 채택하며, 제도주의는 사회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시적 접근을 택한다. 그리고 보완주의에서는 열등처우의 원

칙을 적용하여 여성복지서비스의 최저수준을 주장하는 반면 제도주의에서는 모든 여성의 복지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최적의 사회적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복지서비스의 수혜성격에서도 보완주의는 복지서비스를 자선으로, 제도주의에서는 시민권으로 규정한다(박정숙, 1986:110).

## 3.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은 “정부가 가족에 대해,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Kamerman & Kahn, 1978:3). 그런데 오늘날 각 나라들은 가족구조나 가치가 변화한 데 비해, 국가가 이에 부응하는 제도·법률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정책의 지체가 문제이다(Munson, 1980). 우리나라도 점차 광의의 가족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인데 가족정책은 명시적인 가족정책(explicit family policy)과 묵시적(implicit) 가족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sup>5)</sup>. 한편 변화순(1989:146)은 한국의 가족정책을 두 범주로 나눈다. 인구정책, 아동보육정책, 가족법을 '분야로서의 가족정책'이라 하고,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을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이라 했는데 좀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제까지의 가족정책에 대한 접근은 아래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된다(McDonald, 1979:553).

1) 가족과 정책입안조직과의 관계 : 정책입안기관과 가족과의 관계를 개입적 접근, 지지적 접근으로 분석한다. 국가별서비스의 비교연구와 사회적 약자들 사회보장제도, 가족정책, 여성 중 누가 어떻게 맡는가의 문제를 분석한다.

4) 통합적인 가족복지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김성천, 1989:120)

|       |      |       |      |       |      |        |
|-------|------|-------|------|-------|------|--------|
| 거시적방법 | ———— | 환경적방법 | ———— | 예방적방법 | ———— | 가족복지정책 |
| 미시적방법 | ———— | 심리적방법 | ———— | 치료적방법 | ———— | 가족사회사업 |

5) 명시적 가족정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타아문제, 아동문제, 가족상당이 필요한 가족관계문제, 생활부조, 가족계획, 주택문제, 조세문제 등이 있고, 묵시적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는 가족문제는 도시계획문제, 이민문제 등이 포함된다. 명시적은 의도적, 묵시적은 비의도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변화순, 1989).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명시적 가족정책만을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이다(최성재, 1992).

2) 가족정책에서 개발된 행정과 서비스의 분배 : 가족수당, 편부모, 소년가장,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의 지원방안과 재가복지서비스, 공적부조제도 등이 고찰된다. 복지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에서 할당되며, 할당된 복지혜택형태는 무엇이고,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하여,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는가를 분석한다.

3) 가족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 가족체계가 정책발전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 즉 인구구조의 변화와 여성취업률·장애인·보육대상아동·이혼율 등의 증가등 사회정책을 제반가족변화와 관련지워 가족정책의 시각에서 검토한다.

4) 가족의 구조적 특성 : 취업부부가족, 편부모가족, 소년가장가족, 동거부부, 별거가족들이 대상이며 편모가족, 빈민가족 등의 욕구지표를 연구한다.

5)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 특정한 정책이 가족에 끼친 의도된 결과 또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경험적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는 가족을 구조·상호작용하는 집단·구성원이라는 세 가지 수준에서 연구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과 정책입안조직과의 관계나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다 가족정책에서 개발된 서서비스의 분배와 가족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 연구가 많다(김성천, 1993:35).

#### IV.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분석 결과

가족연구를 위한 접근 방법은 크게 기능론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데올로기와 현모양처이데올로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기능론적 시각보다는 비판적 시각 중 여권론적 시각을 여성의 취업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남녀의 성역할분업을 이상적으로 보는 기능론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여성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며 뿐만아니라 가족을 사회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기능론으로는 취업여성이 행하는 이중노동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술한 실증연구 I, II, III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

##### 1) 노점·행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가족(연구 I)

노점 행상에 종사하는 여성노인들의 주거는 도시개발지역의 무허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의 비율이 높다(50.9%). 중산층가족에 비하여 단독가구, 부부가구, 조모·손자로 이루어진 가구 등 핵가족과 결손가족의 비율이 높고 이들은 장남과 동거하는 여성들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낮다. 노점 행상에 종사하는 여성노인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나 생계때문에 불가피한만큼 생활만족도가 최저수준이다(중산층여성>중산층남성>저소득층남성>저소득층여성). 더구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들은 가족내 역할참여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졌다. 이것은 가사노동과 생계노동의 이중역할로 이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최미경·박혜인, 1991).

##### 2) 파출일에 종사하는 기혼여성가족(연구 II)

이른바 파출부 직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의 70%가 무주택이고 한 집에 평균 4가구가 동거하며 이사빈도 역시 두 해에 한번꼴이다. 이들부인의 소득은 가구소득의 3분의 1정도이고 한편 여성가구주인 경우가 16.8%이며, 남편이 무직인 경우도 13.6%나 되어 가계보조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계담당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30%를 넘는다. 이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주거문제(34.3%)를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70%를 상회한다. 취업모는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와의 관계에 단절을 느끼며 자녀교육 기대는 높다. 부부갈등의 원인은 경제적문제와 남편의 개인적 결함으로 대별되고, 갈등시 혼자 참는 경우가 과반수이며, 의논대상이 없는 경우가 39%에 이른다. 모의 파출일 종사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한편 결혼율이 높게 나타나 공식부문 취업여성보다 직업의식이 소홀하며, 취업한 첫째 동기는

경제적 필요성이다. 사회통념 때문에 일에 대해 몇몇하지 못하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어 경제적 댓가에는 만족하면서도 이직을 희망하였다. 또한 일에 대한 고민은 혼자 참는다가 42%로 가장 높고, 대부분의 파출부들이 가사노동과 생계활동의 이중역할 부담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실 소개소의 불공정거래와 업주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정혜·박혜인, 1992).

### 3)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가족(연구Ⅲ)

대부분이 이농가족이고 핵가족이 82.6%나 되며 청년가족의 비율이 높고 방위가족과의 경제적 지원이 상호간에 거의 없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생산직 취업모의 유아기자녀들 중 30%가량이 유치원이나 학원을 다녀온 후 방치되어 있다. 아동시설에 대한 기대는 시설의 질, 시간연장, 비용저렴의 순으로 요구하였다. 학동기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에도 어머니 자신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나 자녀들은 방과후에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부모희망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훈육에 일관성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특히 물질적 보상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다. 또한 생산직 취업모는 자신의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의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요인과 정서불안정 또는 남편의 사회부적응을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 그런데 부인들은 외도, 노름과 같은 남편의 개인적 비행에 대하여는 갈등을 노출시키나 직장불안정, 권위적 태도와 같이 사회구조에 관련된 문제에는 일종의 체념으로 대응하는 경향이고, 의논대상조차 없다는 비율이 42.1%에 이른다. 이들중 소수이긴하나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유로 회관출입을 하고 기추모임(契聚)을 가졌다. 그리고 모의 가출로 인한 결손가족이 이웃에 적지 않다는 것을 면접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은 하루 평균 3시간 10분이고, 작업시간 9시간 10분과 이동소요시간 1시간 5분을 더하면 하루 총노동시간이 13시간 25분이다. 특히 가사노동시간은 가정생활변수보다 직장관련변수의 영향을 더 받는 까닭에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양육과 교육을, 자녀가 큰 경우에는 친척관계 일을 소홀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와하였다. 그러나 남편 이외에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우가 48.6%이며, 남편에게 역할분담희망이 없는 경우가 39.6%이다. 주로 인적관계망을 통해 취업하는 생산직여성들은 과반수가 일요일도 없이 일하며 월급제보다 일당제, 시급제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비율이 높고 그런 만큼 직업이동횟수가 높아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가 30.5%이다. 열악한 작업환경보다는 건강과 낮은 보수를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는 이들은 이미 성별로 분절화된 무기질의 단순반복작업에 배치되어 온폐된 성차별과 기, 미혼의 차별을 받았다. 동시에 이들은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과 출산·자녀양육 그리고 직장일까지 이중, 삼중의 부담 아래 학비보조, 탁아소, 학교급식, 놀이시설, 휴일확대의 순으로 사회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유가효·박혜인·박충선·조희금, 1991:1992).

위의 고찰 결과 조사대상의 빈곤원인은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주장하는 바 게으름등의 개인적 결함이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주의(universalism)가 강조하는 고용기회부족, 저임금 경제구조, 사회계층적 장애와 같은 사회체제임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 가족의 문제점은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일 : 직업불안정, 열악한 근로조건, 성차별, 기·미혼차별.
- ② 가족 : 자녀양육·교육, 가족관계문제, 주거불안정·열악한환경, 경제적 곤란

## V. 대구지역 저소득층 취업여성과 가족 복지정책 : 분석 및 대책 수립

### 1. 대구지역 복지정책 분석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1988년 대구시가 처음 발간한 「市政白書」(대구직할시, 1988:1)에 의하면 복지행정은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으로 구성되고 그중 사회복지 아래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노인 및 장애인복지, 근로자보호, 의료보장, 부녀아동상담이 들어있다. 그후 두번째로 발간된 1992년 市

政白書에는 사회복지와 별도로 가정복지가 독립되어 그 산하에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건전육성, 아동복지가 있다(대구직할시, 1992:7). 이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행정체제<sup>6)</sup>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1993년 역시 동일하다(대구직할시, 1993:13).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은 일정부분 서구화라고 할 수 있는데, 서구사회를 모델로 삼은 복지정책이야말로 이의 단적인 예이다. 그리하여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사회에서 개인단위의 복지정책이 시행작업을 거쳐 가족단위로 이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족주의라는 전통조차 무시하면서 서구의 개인주의모델을 추종하는 우를 범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가족과 관련되는 항목은 저소득시민 생활보호, 근로자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 등인데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에 두루 걸쳐있고 복지대상이 개인인 경우와 가족인 경우가 혼효되어 있다. 즉 저소득시민 생활보호, 편모가족의 항목은 가족을 단위로 한데 반해 저임금노동자, 윤락녀, 미혼모, 가출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자의 항목은 개인을 단위로 한다.

복지정책 추이를 살펴보면 1991년도는 기본방향이 “건강한가정, 더불어 사는 사회”로서 노인복지와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에 주력하였다. 이어서 1992년도는 “건전한가정, 밝은사회, 복지국가지향” 아래 노인복지, 영세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시설의 운영, 청소년 건전육성,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중산층노인복지, 불우노인복지를 전개하였다. 이어서 1993년도는 “밝은가정, 건강한 지역사회, 복지국가지향”을 내걸고 종합가정복지회관을 區단위로 확충시켜 나갔다. 복지를 내세운 기본방향은 과시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의 것이었으나 저소득층 100가구가상 소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 1992년도에는 143명에 달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을 92년도에 15개소에 설치하고 사회복지관을 13개소로 확충하되 가능

한한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보완주의와 함께 제도주의모델을 도입하고 구홀적 복지에서 수혜 폭을 확대시키어나가는 과도기의 성격을 보인다.

#### 1) 일영역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대상은 기백보호 등의 사립능력이 없는 가족이므로 이들 취업여성들은 제외된다. 한편 근로자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설립 권장,단체협약신고, 노사분쟁조정 등 직업안정을 위한 지원이 있지만 이런 조항은 기혼여성근로자와는 관련이 없다. 대구시에 1988년 6개의 무료직업안내소와 19개의 유료직업안내소를 운영하였어도(대구직할시, 1988:293) 현장조사 결과 공식부분의 생산직 여성들은 비조합원이며, 친지를 통해 일 자리를 구한 게 대부분이다. 뿐만아니라 비공식부분의 파출일하는 여성들은 무허가소개소의 횡포를 감수해야하는 현실로 복지행정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능훈련의 경우도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직종(양재, 흙패선등)’만을 훈련시키는 것이 문제이지만 취업여성들은 생계에 매달려 있는 까닭에 훈련기회 포착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여성회관처럼 시설이 우수한 기관의 훈련, 교육에는 중산층여성들이 모여드는 역설적인 현실이다. 1991년 컴퓨터 등 11개과목 기술교육에 1974명이, 흙패선 등 12개과목 취미교육에 1,896명이 동원되었고 여성교양대학, 자원활동인력은행이 운영되었으나 취업한 저소득층여성들은 수혜기회로부터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잘 이행되지 않았으나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항이나 대책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정규적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를 주대상으로 한다. 결국 저소득층의 기혼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비공

#### 6) 행정기구의 변화(1988년~1993년도)

1988년도 : 보건사회국——사회과·보건과·위생과·환경관리과·부녀청소년과

1993년도 : 보건사회국——사회과·보건과·위생과

가정복지국——가정복지과·부녀복지과·청소년과



식부문과 임시직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에 커다란 맹점이 있다. 저소득층 취업여성들이 요구하는 자녀 학비보조나 탁아시설, 휴일확대의 바램은 직장을 통해 해결할 통로조차 없다. 여성노동력의 활용문제가 1980년대부터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었음(여성사연구회, 1989)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은 취업여성의 복지추구보다는 저렴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단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여권주의 접근이 도입되어 1980년대에 들어와 성차별 문제를 부녀복지에서 다루고, 부녀복지라는 용어를 여성복지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나(권영자, 1986) 대구지역은 1993년 12월 현재 부녀복지 그대로이다. 여성복지라는 용어는 부녀복지에 비하여 변화된 사회상황과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개념체계로서 이 용어로 바꾸는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

## 2) 가족생활영역

① 아동복지는 60년대 보호기능에서 80년대 교육기능으로 바뀌었고, 90년대에는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둘다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91년도에 21개소 아동복지시설에 1,486명을 수용하고, 20개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5개소를 신축하였으며, 41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다(대구직할시, 1992). 92년에는 새마을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 확충하였고, 저소득맞벌이가족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였다. 93년에는 저소득층밀집지역에 7개소를 신축하고, 5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놀이방 16개소를 확충하였으나(대구직할시, 1993) 증가하고 있는 취업모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생산직 여성들은 영리적인 놀이방이나 유치원보다 새마을유아원과 지역탁아어린이집에 의존하였지만 절대수가 부족한 현실이고 연령제한에 곤란을 겪고 있다. 생산직,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대다수가 재취업한 형태라는 점에서 양육문제는 취업여성의 가장 큰 장애로 남아 있다. 특히 양육을 통하여 계층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계층에 상관없이 부모의 교육열망은 높으므로 양질의 보육이 가장 절실하다.

② 1988년의 청소년복지는 시설위주 또는 불우청

소년, 무직·미진학 청소년, 소년가장보호의 차원으로 시작되었다. 청소년상담은 진로지도, 취업정보, 이성문제, 학업문제, 성격문제, 가정문제 순으로 많았다. 상담방법은 전화, 편지, 내방, 출장, 심리검사 등 다양하다. 또한 부모교실, 청소년학교 등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수련이 이루어져 보완주의에서 제도주의로 변모, 청소년전체로 대상을 확대시켰다. 특별히 취업여성의 자녀를 위한 정책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학습공간이 부족하며, 부모가 생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이 주목되었다. 사회봉사단체, 마을금고, 새마을협의회, 아파트자유회 등이 이를 운영하였는데 91년 17개소이던 것이 92년 46개소로 증가되었으며 앞으로의 확대가 기대된다.

③ 부녀상담이라고 불리우는 상담창구는 주로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영세여성, 불우미망인 등의 자립갱생선도가 주요목표인 만큼 저소득층 취업여성들의 가족문제상담창구로 활용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은 가족문제를 담박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의 미덕이 내면화된 상태인데다가, 복지전달체계 역시 미흡하여 문제해결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돕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들은 사회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상태여서 의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다.

④ 무주택저소득시민 대상 영구임대주택을 91~92년에 4개지구, 92년에 6개지구에 설립하였고 93년에는 상인지구에 2,824세대를 건립하였다. 근로자복지주택은 상인동에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주공이 건립하였다. 또한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생필품센터를 2개소(서대구공단노동복지회관, 성서공단근로복지회관) 개설하였다.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정책은 도시영세민 및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민들의 복지배분욕구에 부응, '소유'중심의 주택을 '거주'중심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반영한다. 요컨대 주택을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재원을 투자하여 시장가격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택문

제는 입주자선정의 형평성과 주택규모의 적절성 그리고 저조한 입주율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우리 사회는 자본논리에 따라 부동산자본이 건설자본을 독점하고 주택시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에(이종열, 1993:88) 이에 대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한데, 현재 주택정책의 상징성은 어떤 형태의 주택에 살 것인가보다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집에 살 수 있다는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이 자본주의사회의 이윤추구 대상이기보다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필수품'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인의 신뢰성을 전제로 한 입주자선정방법도 대기자명부 도입 등 기회의 공평성을 부여하는 객관적 운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급대상을 확대시키면 입주율은 상승하나 사회적 기능은 퇴색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입주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도 일부 보조하여 관리비부담의 형평적 차등화를 실현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수혜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지키되 규모면에서 현재 기피되는 7~12평을 고수하기보다는 18평으로 늘리되 비용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요청된다. 또한 職住격리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부분의 비공식부문 종사자는 중심상권에서 일하는 까닭에 일터로부터 멀어지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부담이 가중된다. 그리고 중산층과 함께 거주할 때 소외감, 열등의식이 우려되므로 단지조성도 배려해야 한다. 실제로 주택문제는 건설부 산하에 시청 주택기획과가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입주자선정은 구청 사회과와 일선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다. 즉 실무담당 기관과 건설 및 관리담당기관의 분리로 인하여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장애가 된다. 무엇보다 임대주택의 실수요자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수요공급을 결정하고 재정을 충당하여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 2. 저소득층 취업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

자본주의 진전에 따라 가족복지의 중심이 되는 노동자가족(一番ヶ瀬:1968) 중 저소득층취업여성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자립을 원조하기 위한 일영역과 연관된 대책

① 직업소개: 기존의 소개소 이외에 지역별 복지기관에 직업소개를 위한 공적기구를 상설하여 공식, 비공식부문 여성취업을 알선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② 직업훈련관 운영: 저소득층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교육비제공은 물론 교육기간의 생계비를 보조하고, 사후지도로 취업, 부업까지 알선해준다.

③ 취업여성을 위한 세계개혁: 유배우여성노동자도 가족수당을 받고, 의료보험의 이중지출은 개선하며, 노후연금을 마련하고 세금공제기준을 조정한다.

④ 자녀학비 보조: 복지전달체계상 동사무소 직원이 자의적일 수 있는 영세가족 선별에 가족복지전공자가 개입하게 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취업여성 자녀는 직장 또는 학교의 가계곤란자녀를 위한 장학금의 형태로 학비를 보조한다.

⑤ 지역탁아 시설 확대: 직장탁아의 수혜에서 제외되는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을 위해 저렴한 지역탁아시설을 확대하고 탁아전문요원을 확보하며, 유치원 일부는 종일제로 운영하여 아동의 방치를 막는다.

⑥ 방과후 국민학생 지도: 귀가한 후 준비치되는 저학년생을 윤번제 분담교사가 과제물을 수행하게 하고 생활지도를 한다.

2) 가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가족복지체계 마련

① 주택과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시설: 영구임대주택 같은 공영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비용 용자를 현실화한다. 수혜대상선정은 복지전문가가 맡아 일정소득 이하 취업여성을 대상에 포함시킨다.

② 가족상담 및 치료: 지역별 복지기관에 상설상담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각종 상담기관을 적극 지원하여 특성화해 나가고 유관사회봉사단체가 서로 협조체제 아래 저소득층 가까이에서 상담·치료하게 한다.

③ 사회기구의 야간운영 실시 :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관공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취업 여성의 근무실적과 직업의식 제고의 한 방안이다.

④ 가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제공 : 취업여성의 의식개발, 능력개발, 자질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교육 즉 학습기회의 제공이다. 직업훈련과 달리 가정관리, 육아, 공해 및 소비행태 등의 내용을 종교기관이나 유관사회단체 협력하에 무료의 야간강좌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 3) 예방적복지서비스대책

① '가족복지정책추진위원회' 기구 설치 : 서구와 구별되는 한국가족의 특성을 통찰하고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전망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② 가족문제연구 기구 설립 : 가족에 관련된 상세한 실태조사와 가족연구를 병행하고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족문제연구기구를 설립하여 가족생활에 초점을 둔 제반정책과 서비스를 조정해야 한다.

## IV. 맺음말

요보호대상 위주의 복지정책이 점차 사회전체로 확대되어 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취업여성은 중산층 여성보다도 복지수혜로부터 소외되는 현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을 선언적인 수준에서나마 논의한 것이 본연구의 의의이다. 저소득층 취업여성은, 보완주의 관점에서의 요보호대상자도, 제도주의 관점의 자발적인 복지수혜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가장 취약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이 절실이 요청됨을 밝혔다. 점차 확대되는 복지서비스는 이중부담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취업여성들을 제외시킨 채 점차 그 대상을 중산층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하듯, 연구의 출발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기보다는 더 많은 과제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 역시 다음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현저한 가족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서구식의 가족복지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연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비공식부문, 일용고, 임시고용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서구중심적 사고의 영향으로 인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공식부문의 여성노동력을 개념화할 수 있는 틀의 개발과 더불어 구체적인 자료수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특히 여성노동대책에 관한 연구도 별도로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족복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자연환경, 산업구조, 정치구조, 문화적 가치규범의 체계,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 상호 규정되는 지역주민간의 연대성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주민의 자주성, 주체성, 연대성에 입각한 생활공동체의 확립 아래 정부의 가족복지정책은 더욱 유효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공동체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역으로 가족복지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가족연구도 요망된다.

## 【참고문헌】

- 1) 국토개발원,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1989.
- 2) 권영자, 한국가정과 여성복지, 여성연구 제 4권 3호, 1986, PP.178~205.
- 3) 길태근, 한국도시빈민가족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 4) 김성천, 가족복지 이론체계 구성을 위한 일연구, 사회복지 통권 101호, 1989, PP.100~122.
- 5) 김성천, 한국여성복지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 9권 1호, 1991, PP.153~180.
- 6) 김성천,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접근방법, 「가족연구의 학문별 접근방법 II」,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93.
- 7) 김양희,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 9권 2호, 1991, PP. 111~149.
- 8) 대구직할시, 「시정백서」, 1988:1992:1993.
- 9) 박숙자, 여성과 노동시장, 여성한국사회학회 편,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3, PP.

- 233~266.
- 10) 박정문, 한국도시 비공식부문 파출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7.
  - 11) 박정숙, 체계론적 접근에 의한 여성복지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연구 제 4권 4호, 1986, PP.96~129.
  - 12) 박혜인, 한국사회의 도시 빈곤가족, 한국가족학 제4집, 1992, PP.157~173.
  - 13) 박혜인, 한국사회와 도시저소득층가족,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서울특별시·한국가족학연구회 가정복지세미나, 1990, PP.9~33.
  - 14) 변화순,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종합적 접근, 여성연구 제 7권 1호, 1989, PP.140~159.
  - 15) 변화순,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 9권 4호, 1991, PP.5~42.
  - 16) 배숙희, 도시빈민지역의 특성-대구시 동구 이화촌을 사례로-, 지역동향(대구·경북) 7호, 1993, 88~122.
  - 17) 유가효·박혜인·박충선·조희금,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3호, 1991, 227~246.\*〈연구II-1〉.
  - 18) 유가효·박혜인·박충선·조희금,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제 30권 1호, 1992, 283~309.\*〈연구II-2〉.
  - 19) 유영주, 가족연구의 가정학적 접근, 「가족연구의 학문별 접근방법 II」, 한국가족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3.
  - 20) 이연숙·유가효·조재순·이순형,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생활, 갈등 및 부적응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9권 2호, 1991, 209~223.
  - 21) 이원덕, 상대적 과잉인구에 관한 연구, 경상논집, 1982.
  - 22) 이종열, 우리나라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논의, 지역동향(대구·경북) 17호, 1993, 84~104.
  - 23) 조희연, 종속적 산업화와 비공식부문,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돌베개, 1985.
  - 24) 최미경·박혜인, 주거지역에 따른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제 17집, 1991, 173~196.\*〈연구I〉.
  - 25) 최성재, 가족과 사회정책,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92.
  - 26)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하우, 1992, 7~28.
  - 27)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1989.
  - 28) 허석렬, 도시빈민층의 형성과 재생산, 사상과 정책, 겨울호, 1988.
  - 29) 현정혜·박혜인, 대구지역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연구-파출부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권 4호, 1992, 183~202.\*〈연구III〉.
  - 30)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권 3호, 1983.
  - 31) 雀部猛利·桂良太郎, 「現代家族福祉論」, 김성천·서운 譯, 이론과실천, 1991.
  - 32) 一番ヶ瀬康子·眞田是, 「社會福祉論」, 有斐閣, 1968.
  - 33) 姫岡勤, 家族構成, 森岡清美 編, 「家族社會學」, 有斐閣, 1967.
  - 34) Hartmann, H. I., The Family as the Locus of Gender, Class, and Political Struggle: The Example of Housework,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6, No. 3, 1981. 이효재 편,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 1988, 159~188.
  - 35) Kamerman, S. B. & Kahn, A. J.,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 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 36) Kamerman, S. B. & Kahn, A. J., Child Care, Family Benefits and Working Parent, N. 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 37) Feldman, F. L. · Scherz, F. H., Family Social Welfare: Helping Troubled Families, Aldine Pub., 1967.
  - 38)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nasw),

-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65.
- 39) McDonald, G. W., Typology for Family Policy Research, *Social Work*, Vol. 24, No. 6, 1979.
- 40) Munson, C. E., Development Theory and Family Analysis, *Social Work with Families*, N. Y., The Free Press, 1980.
- 41) Waxman, C. L., 「The Stigma of Poverty : A Critique of Poverty Theories and Policies」, New York : Pergamon Press.
- 42) Wilensky, H. L. & Lebeaux, C. L., *Industrial Society & Welfare*, N. Y. : Free Press, 1965.